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48 호
의 결 연 월 일	2022. 5. 11. (제 9 차)

의
결
사
항

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5. 11.

1. 의결주문

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하나은행에 대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외국환거래법」상 은행의 확인의무 및 서류보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점 업무의 일부정지 조치를 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-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, 제10조(업무상의 의무), 제12조(인가의 취소), 제12조의2(과징금),
-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(업무수행에 관한 기준), 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및 <별표 3> 과징금의 부과기준,
-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등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4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1.12.16.) 심의필
- 제9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2.5.6.) 심의필

<별지>

하나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하나은행 : 과징금 49,900,979원 부과 및 영업점(정릉지점) 업무의 일부정지* 6개월

* 정지대상업무 : 외국환 지급·수령 신규업무(이미 일부에 대한 지급·수령이 개시된 거래로서 조치 효력 발생 전 확인된 한도 내에서 취급하는 지급·수령은 제외)

2. 조치사유

가.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

- 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6조 제3호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5-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-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-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 제1항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·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- 정릉지점, 성북동지점, 안암동지점, 돈암동지점은 2018.8.6.~2018.11.28. 기간 중 거주자인 (주)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(0000000 00000000 0000000000, 000)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(13건, 약 258만달러)*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

*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(건수, 금액): 정릉(5건, 634,900달러), 성북동(5건, 1,541,100달러), 안암동(2건, 271,100달러), 돈암동(1건, 137,350달러)

- (주)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▲▲▲▲▲▲▲ ▲▲▲▲▲ ▲▲▲ ▲▲▲▲▲▲ ▲▲▲의 계좌로 송금 요청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0조 제1항, 제16조 제3호
2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, 제5-10조 제3항

나.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

□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4호,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“지급등의 증빙서류”)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,

① 정릉지점은 2019.4.17.~2020.12.29. 기간 중 거주자인 (주)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가 비거주자인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와 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,

- (주)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(송품장)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(4건, 1,425,569달러 초과) 또는 수령(6건, 3,209,380달러 초과)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② 정릉지점,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 2019.8.8.~2020.10.23. 기간 중 거주자인 (주)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가 비거주자인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○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,

-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* 외화를 수령(179건, 188,315,119달러)**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* (주)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로부터 제출받은 ‘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’의 계약취소 금액만 확인

< 관련법규 >

1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
2.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4호
3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1항 및 제4항, 제4-2조 제1항

다.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

□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,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1호, 제4호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,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(2018.12.24. 이전에는 미화 2만불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,

-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(총 3,580건*)를 보관하지 않았음(검사기준일 2021. 3. 31. 기준)

* 2016.4.1.~2021.3.31. 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,699건의 5.4% 수준

< 관련법규 >

1. 「외국환거래법」 제8조 제6항
2. 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17조 제1호 및 제4호
3.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2-1조의2 제2항, 제4-3조 제1항 제2호

관계법규

□ 「외국환거래법」

제8조(외국환업무의 등록 등)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업무상의 의무)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,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(이하 "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"이라 한다)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인가의 취소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(영업소를 포함한다)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

5의2.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

7.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의2(과징금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6조(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) 거주자 간,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·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(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 (이하생략)

3.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

제2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이하 생략)

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

제31조(양벌규정)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 및 제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외국환거래법시행령」

제17조(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)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.

1.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
4.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

제22조(인가의 취소 등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23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등)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[별표 2]

등록·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22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(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,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.

가. 가중 사유

- 1)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,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.
- 2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감경 사유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- 4)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

2. 개별기준

해당 행위	해당 법조문	처분기준
바.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5호의2	업무정지 2개월
차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12조제1항제7호	업무정지 2개월

[별표 3]

과징금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기획재정부장관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다음 각 목의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.

- 가.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20
나.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40
다.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50
라. 업무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: 100분의 70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. 다만, 별표 2 제1호나목1) 또는 4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

나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

□ 「외국환거래규정」

제2-1조의2(지급 및 수령)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.

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·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하며, 지급신청서 및 제4-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④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4-2조(지급등의 절차) ①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(이하 이 장에서 “지급등의 증빙서류”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-3조(거주자의 지급등 절차예외) ① 제4-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(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.

2.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. 다만, 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.

제5-10조(신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 (제1~27호 생략)

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(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시장분석과	외환감독국
연 락 처	2100-2855	3145-7945